

레고랜드 시공사 이달까지 재공모

도 “1개 업체만 참여 비교 불가”
상위 10위권 밖 업체로까지 확대

도가 춘천 레고랜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공모 절차를 또 다시 밝기로 했다.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 시행사인 LL개발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LL개발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기존 현대건설과 체결했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공모에 나선 결과

1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과의 계약 해지는 공사비 조달에 따른 책임 완공 문제를 놓고 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번 재공모에 참여한 1개 업체는 도가 요구했던 책임 완공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는 착공예정일인 8월까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다른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모 대상을 기존 도급 순위 상위 10위 업체에서 확대해 오는 30일까지 재공모를 실시, 이달 중으로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레고랜드는 주위 부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인 만큼 이 부분에서 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업체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공사 재공모에 따른 공사 일정에는 문제가 없다.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현기자

원주~강릉 복선전철 입찰 비리의혹 수사 속도

관련업체 임·직원 구속

속보=검찰이 원주~강릉 복선전철 공사 입찰 담합 비리 혐의(본보 4월19·20일자 5면 보도)로 대형 건설사 관계

자들을 구속하고 강원경찰도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건설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검·경의 칼끝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공사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이준식)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최모 현대건설 상무보와 박모 현대건설 차장, 이모 한진중공업 부장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대관령 터널 공사비 과다 청구 혐의와 관련해 6곳의 대형 건설사를 수사 중이다. 최기영기자

레고랜드 시공사 대상 확대 재공모

중견 건설사·외국기업도 참여... 31일 최종 결정

속보=강원도가 춘천 레고랜드조성 사업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공모에 1개 건설사만 신청서를 제출(본지 5월 11일자 2면)하자 참여 대상기업 폭을 넓혀 재공모하기로 했다.

강원도 등이 출자해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중인 엘엘개발(대표 탁동훈)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레고랜드 조성사업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논의를 벌인 끝에 1개 건설사가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를 들어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

재공모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로 제한했던 참여대상 기업을 중견 건설사는 물론 외국기업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엘엘개발은 오는 30일까지 재공모 접수를 받아 31일 레고랜드 조성사업 시공사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시행사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재공모에 참여 건설사가 없거나 참여한 건설사가 제시한 조건이 기존에 미달하면 이번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한 건설사를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새

로운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했다.

앞서 엘엘개발은 기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책임 시공'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끝에 계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시공사 재선정을 위해 국내 상위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모작업을 진행했다. 현장설명회에 6개의 건설사가 참가해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 10일 공모 마감결과 1개 건설사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와 엘엘개발은 단독으로 접수한 건설사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참여 기업을 확대

하면 새로운 제안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재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문화재보존지역 재선정으로 착공 시기가 8월로 늦춰진만큼 이달 안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면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단독으로 신청한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었으나 참여기업을 확대하면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재공모하기로 했다"며 "재공모에 참여한 기업이 있다면 제시한 조건을 이번에 단독으로 신청한 건설사의 조건과 비교해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백오인 105in@kado.net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손질 종합-전문업종간 갈등 줄인다

국토부, 건설생산체계 효율화
‘상생형’ 발주제도 마련 추진

정부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종합-전문 건설사 간 갈등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손보기로 했다. 또 해외 사례를 집중 연구해 현행 발주 제도를 상생협력형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건설생산체계 효율화를 위한 상생협력형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보다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기로 했다”며 “상생협력형 발주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종합-전문 간 이견이 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개선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컨소시엄

을 이뤄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때 전문건설사는 하도급자가 아닌 계약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국가계약은 300억 원 이상, 지방계약은 2억~100억원 공사에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국가계약으로 76건이 발주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책임 소재 문제와 전문업체에 대한 물량 배분 위주 운영 등으로 논란이 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계약자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종합-전문 간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계약자에게 공사대금 등 사업관리 권한을 주되 일정한 하자 책임을 묻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무 공동도급 등 중소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들의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김태형기자 kth@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손질

국토부는 또 주요 선진국의 상생협력형 발주 제도를 국내에 도입 가능한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보다 경쟁력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면밀한 평가도 진행한다.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체계는 종합(원도급)-전문(하도급)-자재-장비업체 등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중층적인 구조다. 이 같은 다단계 구조로 인해 중소 전문업체에선 분리발주 요구가 높고, 종합업체에선 효율적 공정관리를 통한 건설품질 향

상을 위해선 통합발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퍼져 참여하게 맞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 간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생산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기 위해 이번 용역을 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을 지양하고 영국처럼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생산체계 혁신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유지키로 했다. 김태형기자

하도급 등 공사대금 지급시스템에 '인출제한' 적용 논란

건설사 자금흐름 차질 우려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와 함께 대금 지급 시스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시스템의 자금 인출제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자금 인출제한을 포함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금 지급 시스템이 갖춰야 할 내용으로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 인출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자조달 이용자 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이 갖춰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계약상대자와 합의한 하도급대금 등의 직접인출 제한이 담겨 있다는 점이다. 자금 인출제한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면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사실상 강제적으로 자금 인출제한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인출제한으로 인해 자금이 묶이게 되

**전자조달법령 개정 추진
업계 “체불 없는 업체까지
일률적 적용해선 안돼
부실징후 기업에 한정을”**

면 건설사들은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

실제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구축해 전 현장의 공사대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대금 사고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이유 등으로 발주기관이 건설사 본사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사에선 대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현장에 참여 중인 하도급업체들의 자금사정 악화 등을 우려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시스템에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들은 인출하지 못하는 자금에 대해 높은 이자비용 등을 지급하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권에서 건설업에 대한 자금줄을 죄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상 자금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건설사들

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금 인출제한은 체불 이력이 전혀 없는 건설사들까지 일률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해 정상적인 건설사들도 자금 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1·2차 하도급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자금 인출제한 대상을 체불 이력이 있거나 체불이 우려되는 부실징후 기업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한 대금 체불 없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해온 건설사들마저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자금 흐름에 애를 먹는 일은 막자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금 체불은 90% 이상이 자재·장비대금에서 발생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로 지급도 대부분 건설사들의 대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건설사들조차 인출제한으로 자금이 묶여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원주~강릉 철도 입찰담합 혐의 건설사 임직원 구속

검찰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판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임직원 3명을 구속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최모(53) 상무보와 박모(41) 차장, 한진중공업 이모(47) 부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이모 부장은 “법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4개 공구를 한 회사씩 나눠 수주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4개 기업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모의한 후 특정 공구의 입찰 금액을 현저히 높게 써내거나 낮게 써내는 방식으로 평균 금액을 임의 조정해 나머지 22개 경쟁사

를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입찰 당시 4개 건설사의 담합 행위를 의심해 201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작년 1월에야 조사에 착수했고 별도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검찰은 이 조사에 적극적인데 4·13 총선 이후 검찰이 새로 착수한 대기업 비리 수사의 대표 주자인 탓이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건설업계는 긴장하며 숨을 죽이는 분위기다.

대형사 관계자는 “공공사업이 한 회사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1사1공구' 제도를 이들 건설사가 악용했다는 점, 그리고 평창올림픽이란 대형 이벤트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이 계약체결에 쫓겼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과소죄로 작용한 것 같다”며 “검찰의 대기업 비리 수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업체로 타깃이 맞춰질까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도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과정에서 거액의 공사비가 빠져려진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최지희기자 jh606@